

2005나90904 대여금

원고 :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피고 : 주식회사 케이엘넷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대출의 경위

(1) 원고 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소외 000는 2003. 1.경 A의 재무담당직원인 소외 C로부터 A가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2) 위 000가 위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A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업체정보, 신용정보,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한 결과, A 자체만으로는 신용도가 미흡하나 피고 회사의 배서가 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 대출에 관한 원고 은행 내부의 승인을 받았다.

(3) 원고 은행은 2003. 1. 13. 위 B의 포괄근보증 아래 A에게 어음할인대출금 10억 원을 약정이율은 원고 은행이 정하여 객장에 고시하는 이율로, 연체이율은 연 21%로, 상환기일은 2004. 1. 12.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함에 있어, 위 C 및 B로부터 발행인 A, 수취인 피고 회사,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03. 1. 13. 지급기일 2003. 3. 13. 발행지 수원시,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00은행 0000지점으로 되어 있는 한편, 뒷면에는 지급거절증서작성 면제 문구와 함께 제1배서인란에 피배서인을 A로 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제2배서인란에는 피배서인을 원고 은행으로 하는 A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약

속어음 1장과 A의 대출금 채무 금 10억 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음을 확인하는 뜻이 부동산자로 기재되고 있고 그 아래에 피고 회사 명의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2003. 1. 10.자 배서확인서, 그리고 피고 회사의 2002. 12. 27.자 법인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4)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A에게 위 대출금 10억 원에서 별지 할인료내역표 제1항 기재 금 15,841,09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84,158,905원(금 1,000,000,000원 - 금 15,841,095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기간의 연장

(1) 그 후 원고 은행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3. 3. 13.에 이르러 A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을 2003. 1. 13.에서 2003. 3. 13.로, 지급기일을 2003. 3. 13.에서 2003. 5. 13.로 각 변경하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포함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한 새로운 약속어음 및 피고 회사 명의의 2003. 3. 10.자 배서확인서를 각 교부받은 반면, 이 사건 대출 당시와는 달리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기존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03. 11.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신거래를 반복하여 왔다.

(2) 원고 은행은 2004. 1. 12.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2004. 1. 12.로, 지급기일은 2004. 1. 26.로 각 변경하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포함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한 새로운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피고 회사 명의의 2004. 1. 12.자 배서확인서(이하, '이 사건 배서확인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은 반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는 교부받지 아니한 채, 기존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04. 1. 26.로 연장하여 주었다.

(3)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별지 할인료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3. 1. 13.부터 2004. 1. 12.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할인료 합계 금 103,046,572원을 공제하거나 교부받았다.

(4) 그러나 원고 은행은 최초 대출 당시 및 각 대출기간 연장시에 한 차례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자를 상대로 위 각 배서 및 배서확인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은행이 2004. 1. 26.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회사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 D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은행이 법인인감 관리자 또는 위 D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

○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인란의 피고 회사 명의는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배서인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 D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 관리자가 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거나 위 D가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위조 또는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날인을 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의 판단

가. A가 부도난 직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일련의 상호저축은행 대출들에 관련된 위 B, C, D가 잠적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 시행된 2003. 1.경 피고 회사가 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던 상황에서 위 대출금 96억 원의 위험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새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증의 의미로 어음에 배서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처음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어음할인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자금담당자 등에 대하여 진정한 보증의사의 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사회입보결의서도 제출받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회사가 2002년도에 A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 35억 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함에 있어서는 위 채무보증,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책임 소멸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하였음에 반하여 2003. 1. 13.부터 2003. 1. 30.까지 불과 18일 동안 원고 은행을 포함하여 4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55억 원의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A의 재무구조나 사업전망, 코스닥등록업체의 전자공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벌규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 회사가 2004. 1. 12. A에게 금 10억 원을 대여한 것은 A의 부도를 막아 피고 회사의 출자금 8억 원과 위 선지급금 1,275,082,875원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B, C, D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였거나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되므로,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의 자금담당자 등에 대하여 진정한 보증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사회입보결의서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정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시중 상호저축은행들이 이 사건 동일한 쟁점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할인의뢰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유통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제3자의 배서를 받아 오는 경우와 같은 소위 이면보증에 있어서 약속어음 배서란에 날인된 제3자의 인영이 그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일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증인을 상대로 진정한 보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평가할 때와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바, 따라서 할인의뢰인과 사이에 처음으로 여신거래 및 어음할인을 하게 된 금융기관이 제3자의 자금담당자 등에 대하여 진정한 보증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이사회입보결의서도 제출받지 아니한 것은 보증의사

를 확인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영의 날인행위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정도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